

붙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14. 8. 26.

사건번호 2014년 형제0000호

수 신 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발 신 자

검 사

000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조00 (0000000-00000000),

직 업

주 거 경북 울진군 000 000 0000

등록기준지

죄 명 유기치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아동복지법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13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변 호 인

2. 피 고 인 김00 (0000-00000000)

직 업

주 거 경북 울진군

등록기준지

죄 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아동복지법위반
적용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변 호 인

II.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0. 5. 24.경 피해자 김00(4세)를 입양하여 양육하고, 2013. 3. 27.경 피해자 정00(5세)를 위탁받아 양육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5. 24.경부터 아들인 피해자 김00를 양육하던 중, 2011. 7. 오전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00 000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실종된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미아방송을 하거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4.경 위와 같은 실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정00이 사망하였음에도 김00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00은 2014. 4. 4. 오전경 경기 00시 000 0000에 있는 0000 시민봉사관에서 사실은 위 정00이 2014. 3. 31. 사망하였음에도 위 김00가 2014. 3. 31. 사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를 0000 시민봉사과 행정8급

장00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0000 시민봉사와 행정6급 이00은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위 김00가 2014. 3. 31. 사망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0000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조00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1. 7.경 영유아인 김00가 실종되어 위 김00를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2013. 2. 21.경 대전시 00구 00동 0000에 있는 00동사무소에서 마치 위 김00를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양육수당을 지급신청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지원받았다.

나. 유기치사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정00의 친모인 김00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그 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옴 질환을 앓아왔고, 2014. 2. 중순경부터 보행이 불편하고 누워서 지내는 상태에 이르렀고, 2014. 3. 중순경부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2014. 3. 29.경부터 호흡곤란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 김00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 이후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중단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 14:06경 경기도 00시 0000 0000에 있는 000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정00이 2014. 3. 31. 14:06경 사망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족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중,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형사4팀 순경 정00에게 변사자의 인적사항을 '김00'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변사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I. 첨부

1.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부
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1부
3. 변호인선임서 1부
4. 피의자수용증명 1부

